

한동훈, 저서 출판 등 공식활동 재개... 與 잠룡들 '기지개'

한동훈, 제2연평해전 다룬 공연 관람
안보·개헌 관련 메시지 부각
SNS서 "상속세 정상화해야" 주장
오세훈, 이달 '다시 성장이다' 출간
김문수, 대구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나은 씨어터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며 차기 여권 대선 주자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가운데, 여권의 조기 대선 레이스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가오자, 침묵을 지키던 여권 잠룡들이 본격적인 대권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포부를 밝힌 저서 출판을 시작으로 지난 2일에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보며 안보와 개헌에 관련한 메시지를 부각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약 두 달만에 가진 공식 행사였다.

한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보훈과 안보를 묵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87 체제를 문 닫겠다는 자세와 희생정

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엔 배현진·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며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슈에 뛰어 들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오는 5일 자신이 쓴 책인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중도 확장력'을 기반으로 여권의 차

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을 화두로 한 책 출간을 예고하며 조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에 출간할 예정인데, '동행'을 주제로 한 시정 철학과 국가 비전을 담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이 강조하는 5대 동행은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사회와의 동행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부부시장은 이날 오 시장의 책 발간 배경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빠져 있다. 국민은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과 기술이 과연 등장해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심'의 지지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권 도전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으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용해나갈지도 또 다른 과제다. 여당 의원 80여명은 지난달 28일 헌재에 공정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삼일절에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대선후보 선호도 46.3% '우뚱'... 보수진영 1~3위 합쳐도 '역부족'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합산 32.6%
정권교체 55.1%, 정권연장 39.0%
與 극우지지층 구애에 중도층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차기 대통령 선거(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또, 정권교체 여론도 과반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대표는 46.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9%, 홍준표 대구시장 6.8%, 오세훈 서울시장 5.1%의 지지도를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모두의질문Q'에 출연해 대담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그 뒤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1%, 이낙연 전 국무총리 1.7%, 김동연 경기지사 1.4%, 김부겸 전 국무총리 1.3%,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 순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보수진영 대선주자 1~3위인 김문수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의 지지도를 합쳐도 32.6%로, 이재명 대표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로 과반에 달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라는 응답은 39.0%로 집계됐다. 정권교체와 정권연장 응답의 격차가 16.1%포인트(p)로 크게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2%, 국민의힘 37.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5.1%포인트 하락해 양당 간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던 연초에는 극우를 중심으로 결집해 여당의 지지도가 오르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져 여론도 변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 인사들이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모습과 민주당의 '중도보수 정당' 정체성 언급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등 극우 지지층에게 구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현재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중도층의 마음이 돌아서 현재 여론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RDD)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독주에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무성

한동훈, 오세훈 등 "임기 3년으로 단축"
권력구조 개편만 반복... 진정성은 글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일부 후보들이 개헌론을 꺼내놓고 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도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며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권 주자들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개헌론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여권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도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잠룡들까지 잇따라 '임기 단축 개헌론'을 언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다음 총선 시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고 제안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김동연 지사도 임기 단축(3년)·분권형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권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입법부 양원제를, 야권의 김경수 전 지사는 조기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야 대권 주자를 통틀어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권 주자 중 선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헌론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헌법이 문제다'

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개헌론에 소극적인 입장인 셈이다.

우선 여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때문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개헌론으로 '물타기'를 해 판을 바꾸려는 의도다. 특히 개헌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 대표에 대해 '1등이라 개헌을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여론 주자들의 전략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주자들은 같은당 인사들에게 제안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선권에 가깝다고 여기고 이 대표에게 '임기를 단축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기에 여권 주자들의 개헌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를 막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야권은 정권 교체할 때 여러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공동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개헌을 언급하며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시 대선을 60일 내 실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과 개헌이 동시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인사는 "(개헌론자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발언만 할 뿐, 현 시대에 맞는 기본권 등에 대한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